한국학계 커먼즈 연구 검토

윤여일 국립 경상대 사회학과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디자인하려는 이론적 도전들이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서 커먼즈 사고commons thinking는 현대 사회체계가 초래하는 불평등 심화, 복지 위기, 연대 약화, 생태계 파괴 등의 사회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서 요긴한 대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커먼즈는 사회과학의 한 가지 키워드로 등장한지 반세기가 지나 지속가능한 전환에서 핵심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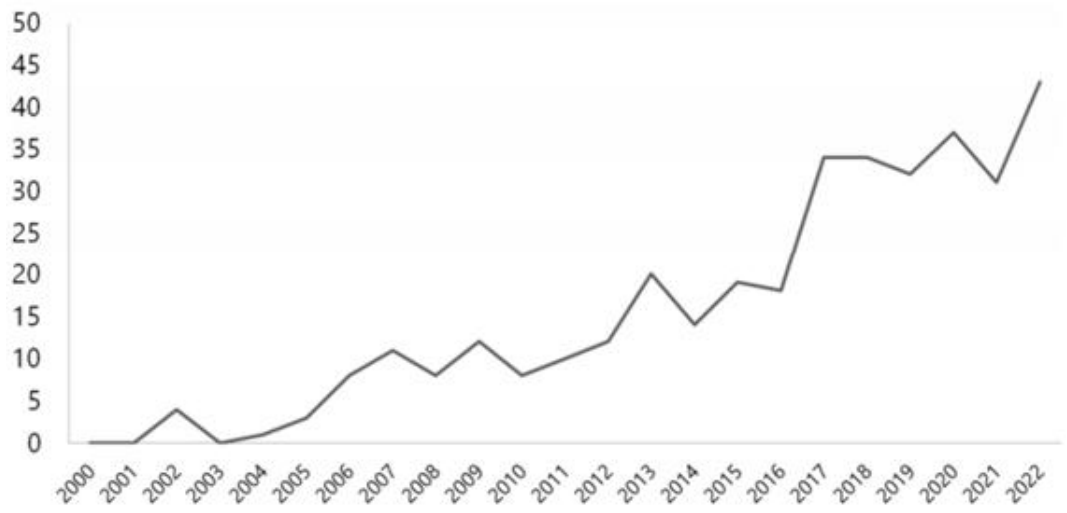
한국학계에서 커먼즈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시작된 새로운 분야다. 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학계에서 커먼즈 연구의 지평은 자연 커먼즈의 영역을 넘어 인민의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과 관계의 영역(먹거리, 에너지, 돌봄, 주택, 교육, 공공공간, 보건의료, 지식정보, 미디어, 도시자치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까닭은 한국사회가 자연자원 고갈, 농어촌 붕괴, 도시인클로저,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 심화, 생물다양성 상실, 기후변화 등 심각한 사회생태적 문제 상황들에 직면하며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데, 커먼즈 패러다임이 이처럼 다양한 사회생태적 문제 상황들을 큰 그림 속에서 정렬하고 연결하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의 지난 성과가 무엇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먼저 한국학계에서 커먼즈 연구의 증가세를 살펴보자. <그림 1>은 KCI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에서 2000년 이후 'commons'를 영어키워드로 삼은 논문의 편수 추이를 보여준다(전체 359편).

2.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 경향의 특징

먼저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일본 커먼즈 연구와 비교해보자. 미츠마타 가쿠는 「일본 커먼즈론의 확장과 과제」에서 일본 커먼즈론의 특징을 소개했는데, 그중 세 가

<그림 1> 2000년 이후 커먼즈 연구 논문의 추이(단위 : 편수)



지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커먼즈론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둘째, 일본 커먼즈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는데, 엔트로피 경제학파가 그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후 산림, 어장 등에 관한 인류학계와 환경사회학계의 현장조사가 활발했다. 셋째, 일본 커먼즈론의 출현 배경에는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1960년대에 표면화된 환경오염 문제가 자리하며, 이로 인해 지역의 자연자원과 공동체의 관리방식에 관한 조사가 활발했다.

이러한 일본의 커먼즈론과 비교한다면 첫째,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2000년대에 시작된 후발 연구이다. 2000년 이전에는 커먼즈를 키워드로 삼은 논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2000년 이전에도 하딘의 '커먼즈의 비극'은 많은 논문에서 언급되었고, 공동관리자원CPRs을 포함한 재화 분류를 다룬 논문 역시 존재했다. 또한 1970~80년대부터 산림계 연구, 공동목장 연구, 공동어장 연구 등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의식적으로 커먼즈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는 아니었으며,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고 말았다.

둘째,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경제학이나 인류학보다 사회학, 행정학, 법학 연구자들이 주도했다. 전체 359편의 논문 중 인류학자의 연구는 19편, 경제학자의 연구는 14편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커먼즈 연구를 이끈 주요 분과학문이 다른 것은 해당 학문의 성격 차이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커먼즈 연구가 출현하고 성장한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셋째,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도시화와 공업화가 초래한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닌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전반적인 사회 위기에서 커먼즈 연구가 출현하고 성장했다. <그림 1>을 보면 커먼즈 논문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고, 2010년을 기점으로 편수가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양상에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가 크게 작용한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한국의 커먼즈 패러다임은 1990년대 말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심화가 출현의 초기 조건이었다. 특히 급진주의 좌파 이론가들 중 일부는 커먼즈 패러다임에 내재한 반反자본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했으며, 반세계화 운동진영에서는 커먼즈를 21세기 대안적 사회운동의 통합기표로 바라보는 인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십 년 뒤인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가 닥쳤으며, 이는 커먼즈 패러다임이 사회적으로 확산한 계기가 되었다. 이 국제적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동해온 이윤창출의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드러냈으며, 201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 보편적 기본소득 요구 등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과 활동들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바로 이러한 동향이 커먼즈 패러다임의 부상과 서로 맞물렸다.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자원을 박탈당해 일상생활의 위기가 고조되자 잃어버린 커먼즈를 되찾거나 새로운 커먼즈를 만들어내려는 실천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커먼즈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의 고조와 폐해를 사회적 배경으로 부상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일본(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지역)과 다른 경로로 전개되었다. 첫째, 토지 · 산림 · 하천 등 그것을 활용하는 지역 공동체가 관리하는 자연 커먼즈 연구에서 시작되어 돌봄 · 교육 · 의료 등 사회 커먼즈 연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시에 그리고 별도로 개화했다. 둘째, 농산어촌의 커먼즈 연구에서 시작되어 도시 커먼즈 연구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시에 그리고 별도로 전개되었다. 셋째, 커먼즈가 무엇이며, 커먼즈가 어떤 유형의 재화에 속하는지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실로 다양한 대상들(지표면 · 지하의 광물, 지상과 지하의 물, 유전자원, 목장, 어장뿐 아니라 도시, 주택, 먹거리, 지식, 문화, 기본소득 등)이 일거에 커먼즈로 해석되었다.

3. 한국학계의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 연구

이처럼 다양한 영역과 소재로 뻗어나간 한국의 커먼즈 연구를 이제부터 정리해보자. 그러려면 기준을 세워 다른 양상의 커먼즈 연구들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커먼즈를 분류하는 방식은 내력(전통적 커먼즈, 새로운 커먼즈), 개방성(폐쇄적 커먼즈, 개방적 커먼즈), 소재(로컬 커먼즈, 도시 커먼즈), 속성(자연 커머즈, 사회 커먼즈) 등 실로 기준이 다양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커먼즈는 그 범주가 다양할 뿐 아니라 분류 기준에 따라 커먼즈에 관한 해석도 달라진다.

여기서는 크게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로 한국의 커먼즈 연구들을 분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논자가 지적하듯 커먼즈는 공동의 자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집단(즉 커머너commoner), 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규칙, 집합적 활동(즉 커머닝commoning) 등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는 해당 자원의 공급과 이용 방식, 필요와 충족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원리적 차이가 난다. 커뮤니티 커먼즈는 전체 동료 시민이 아닌 일부 사용자 집단의 결사를 전제하며, 해당 커뮤니티에서 관리되는 자원은 일차적으로 그 구성원의 활용에 귀속된다. 반면 퍼블릭 커먼즈는 원칙적으로 모든 동료 시민에게 필요에 따른 평등한 접근을 전제로 한다. 두 가지 종류의 커먼즈와 관련된 연구는 전체 359편 중 305편에 이른다. 먼저 커뮤니티 커먼즈와 관련된 총 116편의 연구를 살펴보자.

자치적 관리 모델 연구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입각해 다양한 커뮤니티가 커먼즈를 어떻게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마을은 어원적으로 물을 함께 사용하는 인구학적 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지금도 여전히 커먼즈로 유지되는 산림, 목초지, 연안, 하천 등은 대부분 그것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 공동체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마을의 자치적 관리 사례는 주로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조사했다.
커먼즈의 변동 연구
커먼즈를 해체의 위기로 내모는 동인으로 흔히 '커먼즈의 인클로저'가 거론된다. 거기에는 커먼즈의 자본주의적 사유화와 상품화,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과 임노동화에 따른 공동체 약화, 도시에서의 개발에 따른 공공 공간의 사유화와 축소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20세기 한국사회의 커먼즈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다차원의 역사사회적 변동의 계기들, 가령 20세기 초반 일제 식민주의의 토지조사사업, 산림조사사업 등을 통한 근대적 소유권 도입,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1960~70년대 근대화의 다양한 압력들(상하수도 도입, 농기계와 화학비료 도입) 등도 중시되었다.
커뮤니티의 이용 규칙 연구
커먼즈의 유형과 커뮤니티의 조건에 따라 이용규칙은 달라진다. 가령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개발위원회처럼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위로부터 조직된 마을 조직이 있다. 한편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처럼 자연자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커먼즈 조직이 있다. 마을 조직도 상위 행정기관의 조정을 받으면서도 마을의 운영을 위한 향약을 갖고 있으며, 커먼즈 조직도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의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집행한다. 커먼즈와 관련된 사안에서 커먼즈 조직은 마을 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지만, 마을의 커먼즈를 처분할 때 두 조직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커먼즈 기반 공동체 발전 연구
마을에 관한 주류 연구는 '자산 기반 공동체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에 근거한 마을만들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ABCD 전략은 지역사회의 재생과 개선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활용 가능한 지역의 자산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점차 사회적 경제, 시민자산화 등의 논의와 결합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체토지신탁 등의 실천들로 시야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분쟁과 비협력 해결 방안 연구
1990년대로 접어들며 민주화의 확산, 지방자치제의 본격화, 시민들의 참여 의식향상 등을 배경으로 공유재의 배분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졌다. 2000년대에는 참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정치, 자치적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관료에 의한 전통적인 갈등 관리 방안 대신 공유재를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는 이러한 연구에서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을 적용하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총유와 특수지역권 연구
자연자원을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의해 해당 자원이 장기지속적으로 보전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법학 영역에서도 자연자원의 공동소유나 집합적 이용관계를 법제도로써 뒷받침하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총유와 특수지역권은 토지를 소유하면 토지로부터 타인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근대의 사적 소유 관념과는 다른 방식의 토지와 커뮤니티의 관계가 오늘날에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총유와 특수지역권은 민법학자들이 전근대적 유제로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커먼즈를 위한 법리라는 측면에서 현대적 활용 방법을 강구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퍼블릭 커먼즈와 관련된 총 107편의 연구를 살펴보자.

복지 커먼즈 연구
200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중앙정부들이 수자원, 전력 같은 공공자원과 교육,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거기에 노동과 고용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복지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시민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대안적 복지 구상과 그에 관한 연구가 생겨났다. 그 목록은 돌봄, 먹거리, 에너지,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하다. 또한 2010년대에는 커먼즈론과 기본소득론이 접목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커먼즈 기반 기본소득론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창출하는 커먼즈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한다.
도시의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동 연구
농산어촌과는 다른 도시적 조건에 근거한 커먼즈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촌락과 비교하건대 도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먼즈의 조건이 크게 다르다. 첫째, 토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과 자산이 사적소유화되어 있다. 둘째, 산림과 어장처럼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자원이 별로 없다. 셋째, 구성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다. 넷째, 공간의 규모가 넓고 경계가 개방적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도시에서 커뮤니티 커먼즈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이자 촌락과는 다른 유형의 커먼즈를 창출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에 대한 권리 연구
도시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거리, 공원, 광장, 공터, 도서관 등 도시의 여러 공간과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때로는 그곳의 성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가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노동, 이동, 주거, 교육, 놀이, 의료, 위생 등을 자본 축적을 위한 상품 생산과 소비 영역으로부터 시민들의 자치 영역으로 전환시켜내고자 하는 움직임과 그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커먼즈 연구
디지털 재화는 CPRs 상황을 벗어나 있다. 지식,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재화는 일반적으로 협력재/무형재의 성격을 띠는데, 이 중 협력재는 반(反)경합성과 포괄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반경합성이란 비경합성을 넘어 '더 많이 사용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포괄성이란 타인이 재화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비배제성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접근해야 공동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학계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지식재를 디지털 커먼즈로서 접근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의 정보커먼즈 도입 연구
정보커먼즈라는 개념을 가장 의식적으로 거론하는 분야는 문헌정보학에서의 도서관 개선 연구이다. 이는 현재 정보환경과 정보이용 행태의 변화를 반영한다. 첫째, E-book, E-Journal 그리고 각종 Web DB 등 전자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 및 서비스의 이용에 익숙한 세대가 늘고 있다. 셋째,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도서관의 정보 수집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한국의 여러 도서관도 새로운 공간 구성 개념인 정보커먼즈(Information Commons)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4. 한국 커먼즈 연구의 과제들

이상으로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로 나누어 커먼즈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점차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토지, 산림, 바다 같은 자연 커먼즈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특정 커뮤니티와 밀접히 관련되지만,

이념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두 속성이 중첩되는 커먼즈에서 이용자 커뮤니티와 일반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어렵고도 첨예한 논제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농산어업의 방식변화,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커먼즈로서의 필요를 상실하면서 해체의 위기에 놓이는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애초 하딘은 '과잉 이용'이 '커먼즈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과소 이용'으로 인한 '커먼즈의 해체'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커먼즈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방치되는 농토와 목초지를 로컬 커뮤니티가 외부의 자본에 매각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때 이제껏 그 커먼즈를 관리·이용해온 주민 공동체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그 처분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는 일이 생겨난다. 주민 공동체는 해당 지역의 커먼즈의 처분은 자신들이 정할 일로 여긴다. 하지만 매각 혹은 개발 이익의 분배를 향해 움직이는 주민 공동체와 달리 시민사회는 자연생태를 보존하려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경계의 문제다. 커뮤니티 커먼즈는 경계를 지닌다. 경계가 있어야 그 범위 안의 사용자들이 그 커먼즈를 책임감 있게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 커먼즈의 처분에서 경계는 자율성의 전제인 동시에 배타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을 커뮤니티가 더 이상 커먼즈를 보존하려 하지 않는 경우, 누가 어떠한 기준에서 커먼즈의 처분을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둘째 탈커먼즈화의 문제다. 이 경우 두 집단, 즉 주민 공동체와 시민사회는 모두 농토, 목초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전통적 커먼즈에서 이탈시키려 한다. 주민 공동체는 그 커먼즈에 대한 필요가 약해져 CPRs에서 사유재Private Goods로 재화의 속성을 바꿔 판매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며, 사회운동 진영은 공적 관리를 요구해 CPRs에서 공공재Public Goods로 전환해 보존하려 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커먼즈의 변형이 초래된다.

아직까지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특정 범주의 자원체계를 다루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를 관통하는 설명 방식은 그다지 가다듬지 않았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관리해 오던 자연 커먼즈가 빠르게 상품화·사유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양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포착하는 시각의 마련은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의 시급한 과제이다.